휘발유 싸움 정책문제로“ 비화"

불법유통 마진에 대한 방침 혼선 … 정부 · 기업 감정골만 깊어져

정유사의 휘발유가격 인하경쟁이 정부 정책 결정상의 문제점으로 비화되면서 관련산업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 · 쌍용정유 등 정유5사는 휘발유 가격을 5월26일부터 일제히 ℓ당 571원선으로 인하하는 등 정부 최고 고시가격 ℓ당 172.41원보다 12.22원 낮은 160.19원에 출고키로 했다.

정유5사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쌍용정유에 대해『유통과정에서 5원정도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최종소비자 가격의 추가 인하를 촉구, 쌍용이 이를 받아들인 데서부터 비롯됐다.

쌍용정유는 최초 12원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현행 석유사업법상 주유소 판매가격이 38원 낮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33원만 인하, 나머지 5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정부 통보안에 따라 가격을 추가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6월 폴싸인제 재계약 기간을 앞두고 있는 유공 등 타 정유사들도 쌍용정유의 가격인하에 맞춰 또다시 같은 폭으로 가격을 인하했으며, 이로써 휘발유 가격인하 경쟁은 당분간 현행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4월 쌍용정유가 최초로 가격을 인하할 당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인하폭에 반영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가격인하방법을 통한 불법 유통마진이 발생됐다며 추가 인하를 지시했으며 석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 정유사간 감정싸움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쌍용정유의 불법유통 마진에 대해 정확한 증거 확보가 다소 곤란하나, 실지조사를 통해 만일 주유소에 대한 인하지시가 사실로 드러나면 주유소와 함께 사법처리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주유소의 제재가 전체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우에 한해 정부입장을 전달하는 지도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불법유통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 만큼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정책 일관성의 대원칙이 무시됐다는 의견마저 지적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쌍용정유의 휘발유 가격인하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유통마진에 대해 일체 불문에 부치는 방향 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사후 통제방침을 제시하고 나서 이 문제가 자칫「봐주기식」의 형평성을 잃은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쌍용정유는 이에대해『가격인하 방침이 폴확보 차원이 아닌 소비자의 수요 확대를 겨냥한 단순 가격경쟁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며『유통마진 문제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시장의 근본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1994/6/27>